

진보교육의 미래

BOOKTOK

2021. 02. 23



교권 선진화로 가는길은 아직 멀었다.

- ❖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을 할 때에도 개강 2~3개월 전에 준비
- ❖ 창의적 교육을 한다하고 개학 일주일 전에 학년 발표?
- ❖ 한국에는 교권이 없구나..
- ❖ 행정의 논리일까? 교육의 논리일까? 행정적 편의를 위해 교육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수십년간 유지(2017년 교원 인사발령이 2월 1일로 변경)
- ❖ 선진국 교사들은 신학기 시작 2~3개월 전에 담당학년과 과목 배정
- ❖ 매년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기이한 현상

교권 선진화 ->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 ❖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논지: 한국 초등학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저해하는 교과서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
- ❖ 헌법재판소 —> 교육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교과서 제도는?
- ❖ 자유발행제를 도입해도 모든 교사가 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직접 교재를 편집하거나 집필 가능하고 민간 출판사의 도서를 선택 가능, 특정한 교과서를 지정하지 않고 프린트물과 웹 콘텐츠 등을 활용 가능
- ❖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은 같은 원리라면 검정교과서도 비판해야 한다. 사전검열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교권 선진화 ->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 ❖ 한국 교육에서는 왜 이런 걸 상상하지 않을까?
- ❖ 교육에서 테일러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테일러주의란 20세기 초 산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노동 통제 방식으로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 ❖ 구상은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테니 너희는 실행만 하라는 것이다.
- ❖ 한국의 교육계는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구상 기회를 주지 않는 '교권 없는 교육'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다. 신학기 직전에나 학년을 배정하고 교과서를 직접 고르는 권한조차 없는 한국의 교사들이 교권이 있는가?

2015 교육과정, 이게 최선인가?

- ❖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한 핀란드가 2014년에 발표한 국가교육과정에서 중학 3년간 수학에서 배울 내용을 나열한 것을 보면 단 한페이지에 불과
- ❖ 반면 한국의 2015교육과정은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성취기준'을 하나하나 나열(학습목표를 성취기준으로 바꾼 것 뿐)
- ❖ 교육과정 간소화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된 행정 규제가 심각한 수준(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54페이지이며 시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학업성적관리지침'은 2018년 고등학교의 경우 100페이지가 넘는다.)
- ❖ 한국 국가의 교육과정은 입시와 연계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음. 역량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수능은 여전히 객관식이라,,, 문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수능 개편에 부랴부랴 나선 이유

동일교재, 동일진도, 동일 시험

- ❖ ‘난중일기’ 읽어보신분?
- ❖ 국사에서 [난중일기]를 읽고 느끼고 토론하는 교육이 아니라 [난중일기] 라는 네 글자를 외우는 교육
- ❖ 한국교사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음
- ❖ 중고등의 경우 ‘학년단위’로 평균과 석차를 매기도록 위와 같은 방식을 3반 선생님이 제안할 경우 동의가 돌아올까? 왕따가 될까?

‘교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한가?

- ❖ 세월호 추모 공간에 강연 중 ‘안전교육 공문때문에 안전교육을 못한다.’
- ❖ 인성교육 특별법은?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가 가중. 민주시민교육은?
- ❖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교과교육에 녹아 있어야 하는게 정상
- ❖ 교권 선진화의 목표: 창의적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효율화(행정 규칙을 파격적으로 간소화 교사의 자율성 부여)

교권을 저해하는 요인(정리)

- ❖ 교사가 충실한 기획과 준비를 하기 어려운 일정
- ❖ 선택하거나 집필할 권한이 없는 교과서
- ❖ 지나치게 자세한 국가 교육과정
- ❖ 수업과 평가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특히 '학년'단위 평가
- ❖ 교사 행정업무의 과다

대입제도 논쟁

BOOKTOK

2021. 0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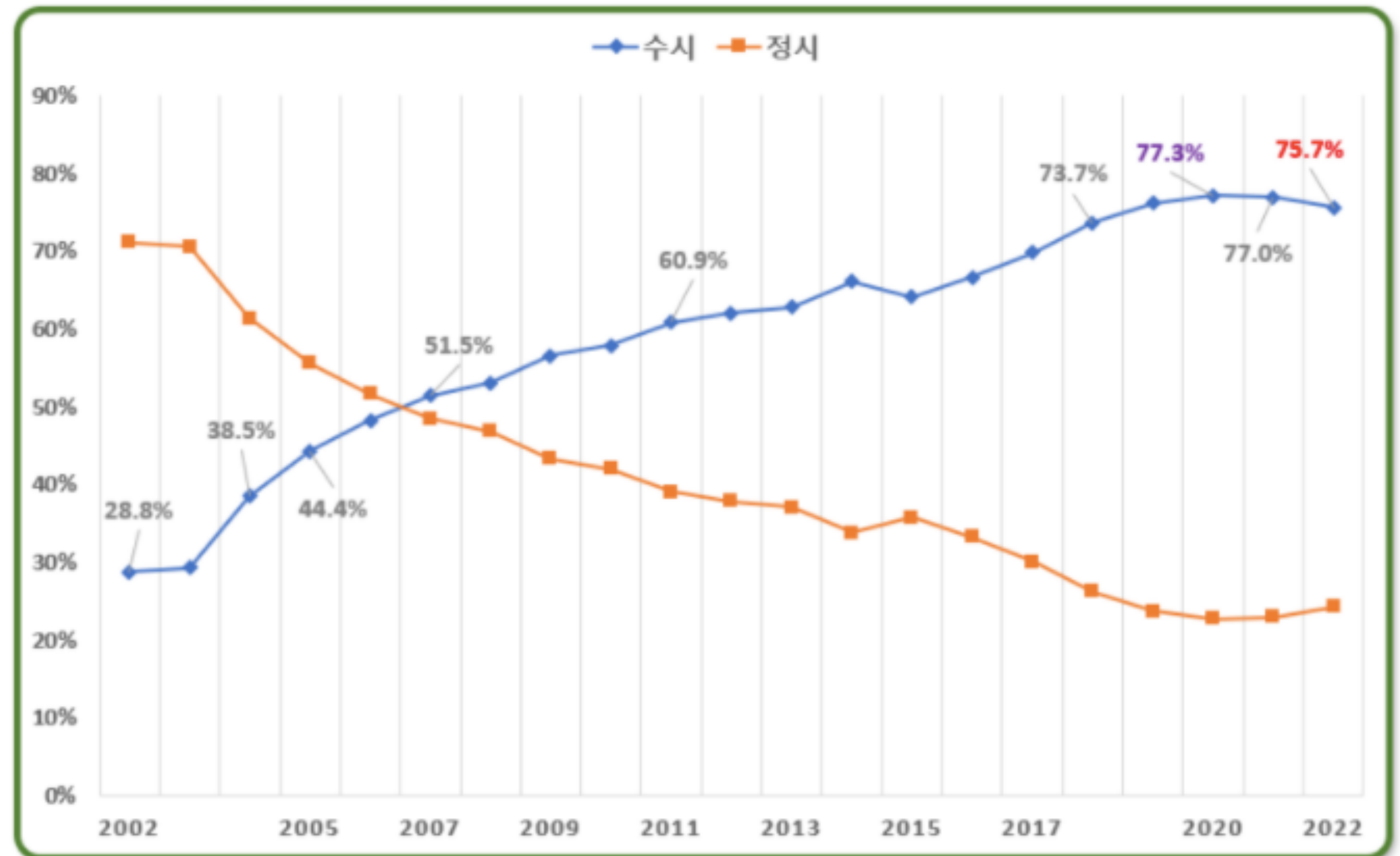
“김상곤” 쇼크

- ❖ 교육공약 발표: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 미국: 정시모집과 조기모집(조기결정, 조기지원), 수시는 조기결정.
- ❖ 미국은 정시, 조기 모두 전형요소에 차이 없음. 우리는 서로 크게 다름.(학생부, 수능)
- ❖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내신 성적만), 학생부 종합전형(내신+자기소개+비교과 = 입학사정관), 논술전형(대학별 출제), 실기위주 전형(특기자 전형 포함)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정원 비율(4년제 대학)

- ❖ 4월 문재인 후보 공식 공약집
- ❖ 수시/정시비중 언급 없음
- ❖ 수능 절대평가 추진
- ❖ 수시 전형 대폭 개선

20년간 수시, 정시 비율 변화



수능, 상대평가? 절대평가?

- ❖ 학부모들은 학종을 걱정하는데 학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수능부터 개편한다고 발표
- ❖ 2020년 현재 수능 성적표에는 상대평가 지표만 표시(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일종의 수학기공식으로 정리)
- ❖ ‘김상곤’의 수능 절대평가 추진: 학생의 경쟁과 부담을 완화, 수능의 영향력 약화, 여러줄 세우기 가능 그러나 학부모는 학종을 좋아하지 않는다.
- ❖ 학종의 전신은 “입학사정관제”(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

이명박 정부: 학교 밖 스펙을 점차 금지

- ❖ 학종의 비교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 2010년 학교 밖 수상경력 금지
- ❖ 2011년 해외 봉사활동과 어학시험 금지
- ❖ 2013년 발명 특허가 금지
- ❖ 2014년 논문 등재와 도서 출간 배제

학종의 기본 전형

- ❖ 내신성적(상대평가 등급제)
- ❖ 세부 특기사항(정성적 평가)
- ❖ 비교과: 독서, 동아리, 봉사, 교내 수상, 소논문 등
- ❖ 수능: 최저학력기준
- ❖ 기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 ❖ 면접

김상곤 쇼크의 시작, 2017 수능 개편

- ❖ 실제 상위권 대학의 정시 입학자와 학종 입학자를 비교하면 특목고-자사고 출신은 비슷하며 서울 수도권 출신 및 고소득층 비율은 학종보다 정시(수능)에서 더 높게 나타남
- ❖ 즉, 학종이 금수저에게 더 유리하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님
- ❖ 정부는 학종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임을 감안한다면 '수능 개편안'보다 '학종 개편안'을 먼저 발표했어야 함

김상곤 쇼크의 시작, 2017 수능 개편

- ❖ 수능 절대평가의 문제
- ❖ 정시 모집에서 합격 / 불합격을 가르는 변별력(면접, 내신, 수능 원점수), 절대평가는 등급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제 활용. -> 경쟁을 줄일 수 있는가?
- ❖ 적어도 상대평가의 고유한 결함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은 다른 학생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음(물리, 경제를 기피라고 아랍어로 불리는 현상)

2017년 8월 10일 수능 개편안 발표

- ❖ 1안: 절반은 절대평가, 절반은 상대평가
- ❖ 2안: 전 과목 절대평가
- ❖ 김상곤은 2안으로 가려고 1안을 들러리 세운 것일까? 아니면 반대일까?
- ❖ 2안을 포기한 이유는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강력한 견제(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정시모집에서 변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대비 부족)
- ❖ 그러나 1안으로 가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량이 늘어남.(통합사회 + 통합과학을 합쳐 한 과목이라고 적는 꿈수, 각각 8단위씩이니 무려 16단위의 거대과목)

2017년 8월 10일 수능 개편안 발표

- ❖ 2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제도를 채택하되 원점수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의 3안도 제시하였으나 묵살
- ❖ 결국 1, 2안중에 결정하지 말고 차라리 연기하자! 결국 1년 발표 연기(공론화)

진보교육감 시대의 탄생

- ❖ 교육에서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자면?
- ❖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나요? 70% 기록
- ❖ 보수교육: 경쟁, 서열화, 주입식, 부패 등의 부정적 시선
- ❖ 진보교육: 협동, 평준화, 창의력교육, 청렴 등의 긍정적 시선

진보교육감은 입시를 잘 모른다.

- ❖ 대입을 잘 모른다. 입시 때문에 교육을 망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입시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중적 태도
- ❖ “수능 자격고사화” 및 “수능 폐지” 주장: 대학 합격 여부를 내신성적으로 가려야 한다. 그런데 수능과 내신 중 체감 경쟁 강도가 더 높은 것은 내신
- ❖ 실제로 추진한 경험 있음: 노무현 정부시절 2004년에 발표한 2008년 대입 개편안(수능 등급만 표시, 내신은 상대평가로 바꾸어 성적 부풀리기 방지)
- ❖ 2005년 고 1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자살하는 사태 발생

진보교육감은 입시를 잘 모른다.

- ❖ 2005년 5월 7일 '한국청소년모임' 위원장 신지예 학생은 “우리는 내신등급제도 본고사도 원하지 않는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밟아야 하는, 물건에 점수를 매기듯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는 이 전쟁터 같은 학교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발언
- ❖ 13년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바로 그 “신지예”
- ❖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 내신 부풀리기
- ❖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면 ‘균등선발효과’ 절대평가로 바꾸면 ‘균등선발효과’가 무너짐. 특목고 자사고 강남 집값 상승은 필연적. 즉 교육이 아닌 정치문제

진보교육계의 한계점

- ❖ 대학 서열화를 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하였지만 정작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방안 마련을 못함
- ❖ 비난만 할 뿐 대안을 만들지 못함. '구호'나 '가치'가 곧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착각
- ❖ 김상곤 장관의 실패는 진보교육 진영 전체의 실패
- ❖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앙정치와 국가정책의 문법을 만들어야

OECD 국가 대입제도

- ❖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겨 반영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 한국의 대입은 '객관식 입시+비교과 반영+내신 상대평가'라는 매우 희안하고 기괴한 조합
- ❖ 입시 성적 위주로 선발, 내신 성적 반영하지 않는 나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공교육을 살리려면 내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 입시의 차이(객관식vs논술)
- ❖ 입시 성적과 내신 반영 국가: 독일, 호주, 스페인, 덴마크(내신은 대부분 수행평가)
- ❖ 입시 성적과 내신을 선별적으로 반영: 스웨덴(1/3은 입시성적, 반영여부 대학 자율)

OECD 국가 대입제도

- ❖ 미국: 내신 + 입시 + 비교과
- ❖ 미국에서 비교과는 학생부가 아니라 주로 자기소개서에 반영
- ❖ 학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한국의 지식 생태계가 미국 유학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 유럽에 유학한 사람이 많았다면?
- ❖ OECD 국가, 대세는 논술형: 객관식 문항은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 맞추도록 요구하는 반면, 논술형 문항에서는 나의 논리, 나의 의견, 나의 정서를 표현하고 구성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시. 무엇이 민주시민 교육에 유리할까?

OECD 국가 대입 대세는 논술형

- ❖ 수능은 정말 지식이나 암기만을 측정하는 시험인가?
- ❖ 학력고사에 비하여 수능은 암기의 비중이 낮아지고 독해력 추론능력 등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비중이 커짐. 그런데도 객관식 문항으로서는 한계가 있음

조선은 왜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

- ❖ 하늘의 변화는 어떠한 이치에 따르는가?
- ❖ 공납을 장차 토산품 대신 쌀로 바꿔 내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논하라
- ❖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이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 ❖ 요즘 일본인들이 울릉도 주변 우리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해 자세히 나타내도록 하라.

내신 상대평가, 치명적 문제

- ❖ 합리적 과목선택을 방해(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은 내신 절대평가 패키지)
- ❖ 학생의 객관적 성취수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함(각 등급을 부여, 학교차이)
- ❖ 교권의 핵심인 '평가권' 침해를 제도화
- ❖ 내신 상대평가는 체감 경쟁 강도가 높음

내신 상대평가, 치명적 문제

- ❖ 교육부가 대학들을 평가할 때에도 상대평가를 도입한 대학들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교육부가 교육학의 기본에 어긋나는 정책 시행): KAIST,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일부 대학만 절대평가 시행 —>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 ❖ 그러나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시

- ❖ 진정한 미국식? 객관식 입시를 시행하되 고교 교육을 여기서 분리해본 적이 있는가?
- ❖ 진정한 유럽식? 수능을 논술형 문항으로 바꾸고 학교에서 이를 준비해주는 교육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가?

학종은 어디서 왔을까?

- ❖ 입학사정관제의 아들
- ❖ 하지만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유색인종, 여성, 저소득층 등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통로로 활용
- ❖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누가 선발되는가?
- ❖ 19세기 후반 유대인 인구비율이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버드대 신입생의 30%, 컬럼비아대 신입생의 50%를 유대인이 차지

자유? 규제? 뭐가 좋은가?

- ❖ 5.13 교육개혁 이래 도도히 이어져 온 자유의 물결에 두가지 문제
- ❖ 자유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부여(기업의 자유만 강조하고 노동자나 소비자의 자유를 배제한다면?) 사립학교 자유권
- ❖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육과정 간소화, 교사별 평가 등 개인의 자유 확대 필요
- ❖ 선택과목 확대? 개인인가? 기관인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 ❖ 평준화를 넘어 자유화로?

교육제도의 사회 용인

- ❖ 사립은 자율, 공립은 규제? 민간기업은 자율, 공기업은 규제? 라는 프레임
- ❖ 박정희 대통령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고교 평준화 단행은 잘못? 공공 병원과 민간병원 구분 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무조건 진료하도록 만드는 제도는 잘못?
- ❖ 사회적 합의는 '자율이 좋다'는 가치관이나 공립/사립, 공공/민영 사이의 구분보다 우선하더라.

교육제도의 사회 용인

- ❖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사립학교의 재정과 학생 선발을 자율화 하는 순간 등록금도 비싸게 받고 성적이 높은 학생을 골라 입학시키는 대입 명문고의 출현
- ❖ 고교평준화의 훼손은 진보와 보수가 합작해서 만들었음. 자사고는 이명박정부라고 생각하지만, 민사고-상산고 등 6개의 자사고를 최초로 인가한 것은 김대중 정부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학고 3개, 외국어고 무려 11개 인가.
- ❖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성여론은 65% 정도인데 실제로는 아님.

수능도 학종도 공정하다?

❖ 입학자 중 학종 입학자가 더 성적이 높은 이유는?

- 수능에 비해 학종 입학자가 재수하기 어렵다.
- 학종 입학자는 전공준비가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다.
- 학종에 반영되는 고교학업성적과 대학 학업성적은 그 구성요소가 비슷

초중고 교육계는 왜 학종을 선호?

- ❖ 학종에 내신 성적이 주요한 요소임
- ❖ 세특이 수업과 평가를 개선함
- ❖ 학종이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과 진로교육을 활성화 함

어느 쪽이 금수저 전형인가?(팩트 체크)

- ❖ 학교별로 학종과 수능의 분포는 거의
- 서울 10개 주요 사립대학: 2017년 일
- 서울대학교 일반고 비율 학종-53.7%
- ❖ 학교별 분포와 달리 지역별 분포는 어
위 2017년 10개 주요 사립대학: 수능 비
권 고교비율-43.9%

